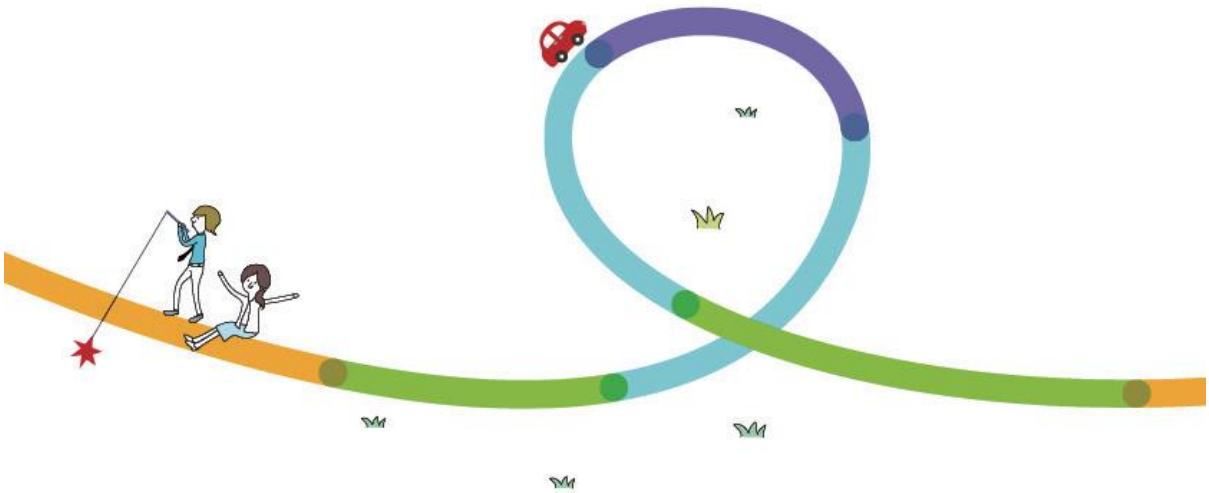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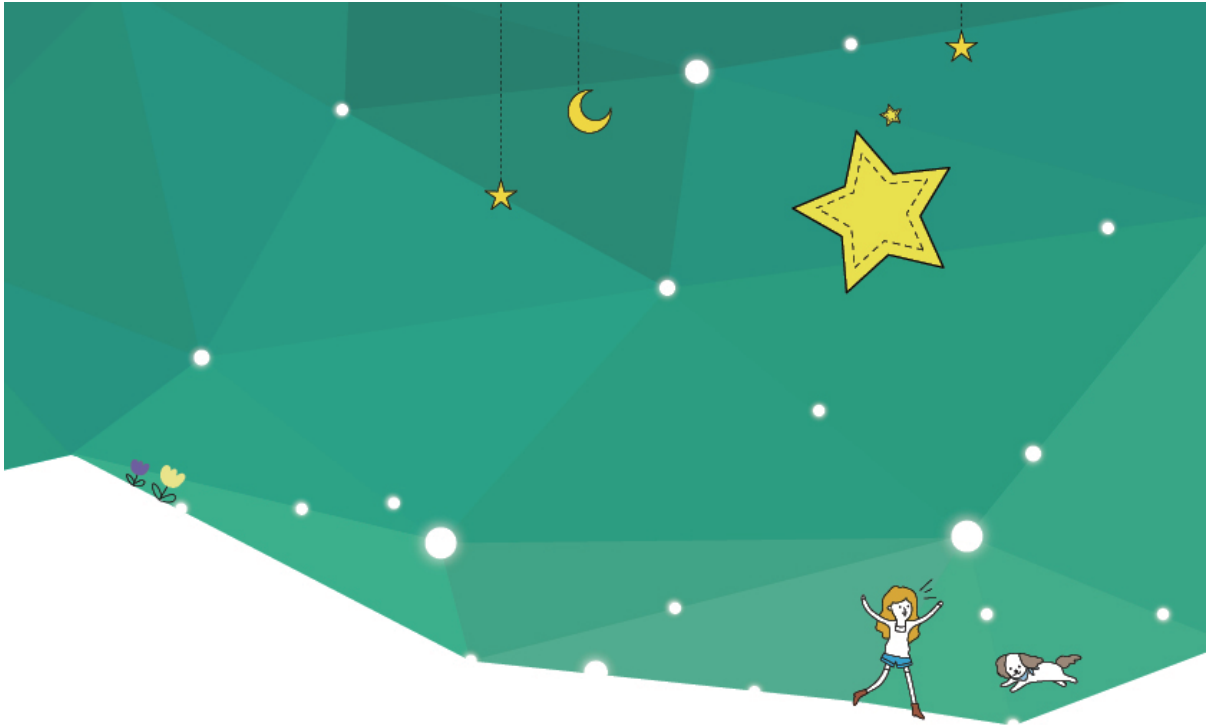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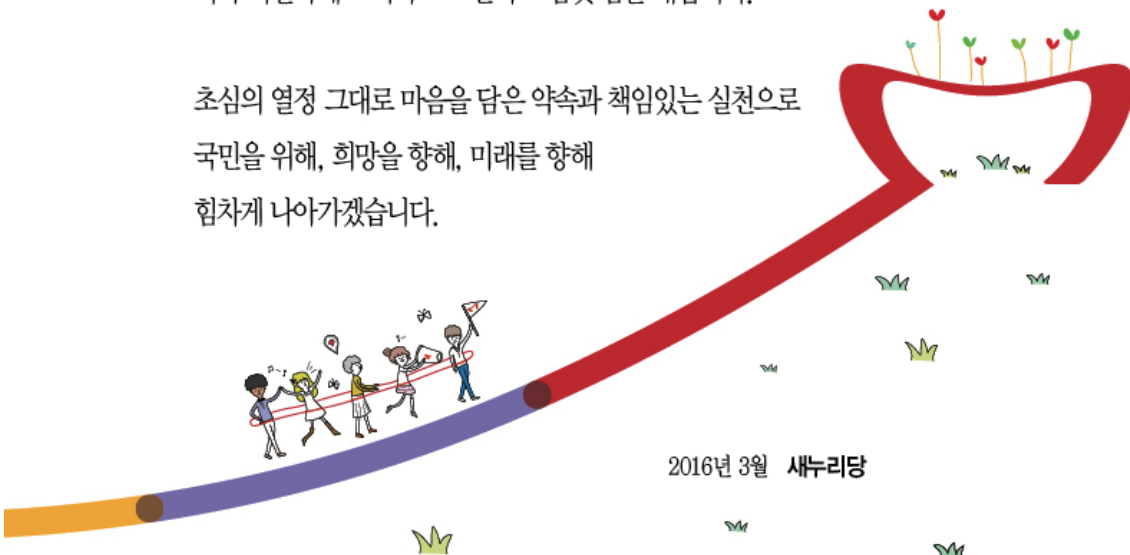
국민의 마음을 품은 약속의 길!
새누리당이 실천의 길로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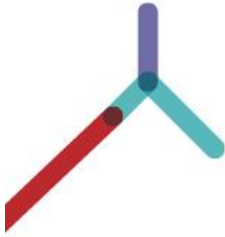


창조와 변화를 향해 달려온 땀과 열정의 시간,
그 중심엔 항상 국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약속에 희망을 품고, 그 희망으로 살아온 것을 알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길을 찾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힘껏 힘을 내봅니다.

초심의 열정 그대로 마음을 담은 약속과 책임있는 실천으로
국민을 위해, 희망을 향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16년 3월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3대 분야
20대 실천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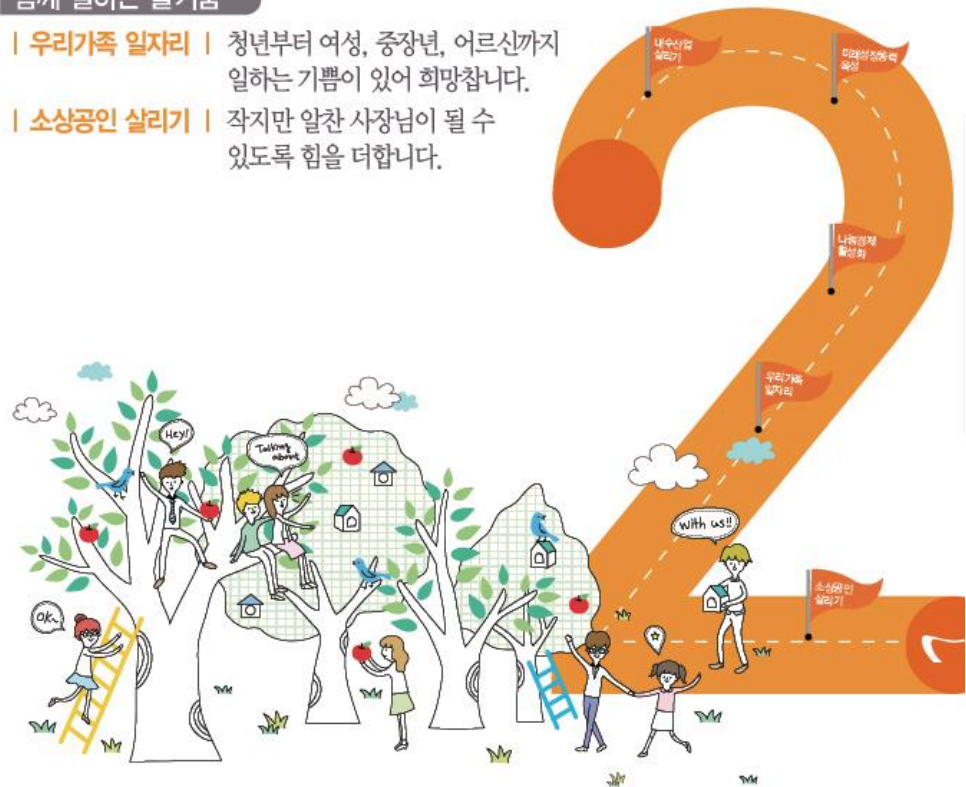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일자리 중심 성장

- | **내수산업 살리기** |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 | **미래성장동력 육성** | 대한민국에 새로운 엔진을 달아줄 미래가치를 만들어갑니다.
- | **나눔경제 활성화** | 나눔과 공유로 경제에 불씨를 지피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

- | **우리가족 일자리** | 청년부터 여성, 중장년, 어르신까지 일하는 기쁨이 있어 희망칩니다.
- | **소상공인 살리기** | 작지만 알찬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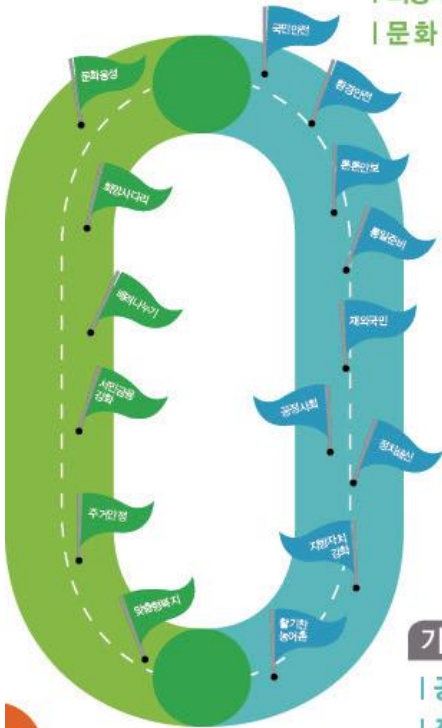
누구나 행복한 희망 하나로!

우리집 행복 맞춤

- | **맞춤형복지** |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 | **주거안정** | 집 걱정없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서민금융강화** | 서민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행복지수 100% 도전

- | **배려나누기** | 소외된 이웃, 그들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 | **희망사다리** | 지친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합니다.
- | **문화융성** | 세계 속의 대한민국 브랜드를 활짝 꽃피웁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미래 변화의 중심

- | **국민안전** | 살기좋은 대한민국, 여성도 우리 아이도 모두 안전합니다.
- | **환경안전** |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 | **튼튼안보** | 새로운 한반도 시대, 단호하고 굳건한 안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 **통일준비** |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의 힘

- | **공정사회** | 차별과 격차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정치쇄신** |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진심을 다하여 실천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

- | **지방자치 강화** | 지방자치가 활발해지고 지방경제가 튼튼해집니다.
- | **활기찬 농어촌** | 경쟁력을 살려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듭니다.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일자리 중심 성장

내수산업 살리기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10% 유턴시).....	29
	문화체험·산악관광 인프라 조성,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시스템 구축.....	30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	32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 확보.....	33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4

미래 성장동력 육성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	37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기반 제공.....	3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39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	40
	중소기업 공공구매 대상기관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확대.....	41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중소벤처 자금공급 확대.....	42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개인을 발굴, 포상, 격려.....	43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	지역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등44
	19대 성장동력·5대 고부가가치·초혁신·삶의 질 향상 분야 지원 대폭 확대45
	바이오, 나노 기술 개발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46
	지능정보화 성공기업 발굴 및 SW융합클러스터 조성, ICT 기술의 상용서비스 개시47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여 달 탐사 자립기반 확립48
	R&D 기초연구 투자 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 확대49
니움경제 활성화	사회적 거래소 설립, 사회적 투자자 육성, 시니어 재능기부 بانک 구축 51
	숙박·치량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52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함께 일하는 즐거움

우리가족 일자리 어르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55
	「노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육 지원 근거 마련56
우리가족 일자리 여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5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60
우리가족 일자리 청년·중장년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지원63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 재학시 벤처학자금 수여로 벤처기업 취업 연계64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국제경험 체험기회 제공65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 문화를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66
	장년 근로자의 생애고용 지원 강화67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69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 육성	70
지역업 창업 지원 효율화 및 한계 소상공인 전직·전업 지원 확대	7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72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공동·협업 환경 마련	73
전통시장 내 주차장 및 ICT 카페 등 고객 편의시설 확충.....	74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

우리집 행복 맞춤

맞춤형 복지 우리가족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4월부터 대학병원에서도 가능79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및 생계형 자동차 보험료 면제80
	경력단절 주부, 청년 취·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확대81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82
	임신·출산·육아관련 서비스 원스톱 제공83
	직장인 학부모도 가능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 추진84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확대85
	학생·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충족 및 건강 증진에 기여86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87	
맞춤형 복지 어르신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 건강권 강화89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90
	어르신들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완화91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자살예방 관리 강화92
	맞춤형 노인복지센터로 다양화,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르신께 제공93
맞춤형 복지 우리아이	짬통 및 냉동교실이 없는 에너지 자립학교95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96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97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

맞춤형 복지 우리아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98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99
	보호 사각지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	100
맞춤형 복지 청년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103
	청년중심의 통합지원체계 마련	104
주거안정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로 서민주거 안정 도모	107
	뉴스테이 정책 조기 정착 유도 및 임대주택 수요자 생활여건 개선	108
	공공임대주택 기능 향상 및 주거약자의 주거안전 확보	109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화로 1~2인 가구 주거안정 기여	110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111
	행복주택 지속공급으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112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입주비용 절감 및 학생 주거환경 개선	113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114
	인건비 관련 기준 명시 및 관리비 빅데이터 구축으로 공공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	115
	비의무관리대상 중소규모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로 관리비 분쟁 감축	116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

우리집 행복 맞춤

서민금융 강화	인터넷은행 10%대 대출상품, 원스톱 금융지원서비스,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등 119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 120
	헬스케어 활동, 운전습관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 121
	불완전판매 금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22
	보이스피싱(그놈목소리),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발본색원 123
	위장사고·보험금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처벌강화 124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

행복지수 100% 도전

배려나누기 장애인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127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구축	128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9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기준금액 개선	130
	권역재활병원 확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으로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	131
배려나누기 다문화가족	다문화 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	132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평등 실현	133
배려나누기 사회적 약자	어르신·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134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 및 교사 관찰·추천제 내실화 ..	135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근로자 국비유학기회 수혜대상 확대	136
	법률홈닥터를 2배 늘려 수혜계층 확대	137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시간 및 소득을 합산한 고용보험 적용	138
	교육급여 수급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139
	기부연금제도 도입 등 「나눔기본법」 제정, 기부금품 모집·사용 제도 대폭 개선	140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성과연계보상(SIB) 시범사업 추진, 단계적으로 확대	141	

모두가 행복한 희망 하나로!

행복지수 100% 도전

희망 사다리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활용 지식멘토링 전국 확대.....	143
	무료 온라인공개강좌 서비스로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	144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맞춤형반' 운영·확대 및 전문대학 특성화로 세계적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 육성.....	145
	EBS-2TV(교육방송) 조기 실시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146
	수학 및 S/W 체험관 설치	147
	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	148
	청년취약계층 자격증 취득시 응시료 지원	149
문화융성	맞춤형 문화복지로 문화사각지대 해소, 생활 속 문화활동 활성화.....	151
	문화·관광·콘텐츠·ICT가 결합된 올림픽으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152
	국민의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한 공공체육시설 설치.....	153
	권역별 게임산업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	154
	「체육인복지법」 제정, 체육연수원 건립	155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구축	156
	문화재 1생생문화재사업 실시, 문화재돌봄사업 확대	157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미래 변화의 중심

국민안전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161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162
전국 18개 지역에 스마일센터 설치	163
순찰에 필요한 기초 경비 지원 확대 및 젊은층 참여 확대로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	164
우범자 소재 파악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근거 법제화	165
신고문화 활성화,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	166
정부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국민편의제고	167
뒷골목, 우범지역 등에 CCTV 확대 설치	168
시민의 수면권·평온권을 침해하는 야간집회 일정시간 제한 추진	169
주택가·상가 주변의 생활도로구역 지정, 횡단보도 설치 기준 완화	170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우려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171
심리장애로 고통받는 소방관·경찰관의 심리치료센터 확충	172
자치단체가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안전도시 인증	173
'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	174
육상·해상 특수구조대, 골든타임 내 구조가 가능하도록 헬기 등 장비 확충	175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보호	176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국민안전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공유분석센터 지원, 훈련장 구축 및 R&D 투자 확대 177
	원자력 안전을 위한 환경구축, 방사능 재난 예방 및 모든 정보 원칙적 공개 178
	모든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 179
	유아·청소년 대상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확립 180
환경안전	어린이·어르신 활동 공간 환경 개선 및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183
	환경책임보험 구제급여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184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취수원 다변화, 물질약 체계 구축 185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및 정비 추진 186
	도심 속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비오톱 조성 187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3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한중 협력강화 188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실현 189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190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미래 변화의 중심

튼튼안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며 굳건한 대북 안보체계 확립.....	193
	장병 의료지원체계 문제점 해소로 장병 삶의 질 향상	194
	인생을 계획성있게 설계하도록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 가능한 여건 조성	195
	군복무 기간이 발전기·재도약기가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196
	훈련수당 현실화함으로써 예비군들의 부담 경감	197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4년간 10만원 인상 및 진료비 감면을 확대	198
	국가위상 제고 및 한류 확산, 수출증대에 기여	199
통일준비	이산가족 정체성 제고 및 교류채널 다각화 기반 조성	201
	「북한인권법」 시행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권 개선촉구	202
	탈북민 자녀양육 지원은 물론 취업, 교육 등 지원확대, 남북통합문화센터 조성.....	203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실질적 통일준비	204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실시.....	205
재외국민	복수국적 가능 연령 확대	207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208
	우리국민의 해외체류시 안전 및 편익 제고	210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기본과 원칙의 힘

공정사회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 가맹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213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등 공시의무 부과 214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대기업의 변칙 상속, 역외탈세 차단 215
	공공재정 부정이익금은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216
	인사관련 부정행위자, 정보공개 추진 217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및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 218
	임금체불 사업주 재재 강화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219
	발주계약 기반 자금지원시스템 도입으로 중소기업 초기 제작자금 지원 원활화 220
	2020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0개로 확대 221
정치쇄신	국회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천 223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고, 윤리심사 강화 22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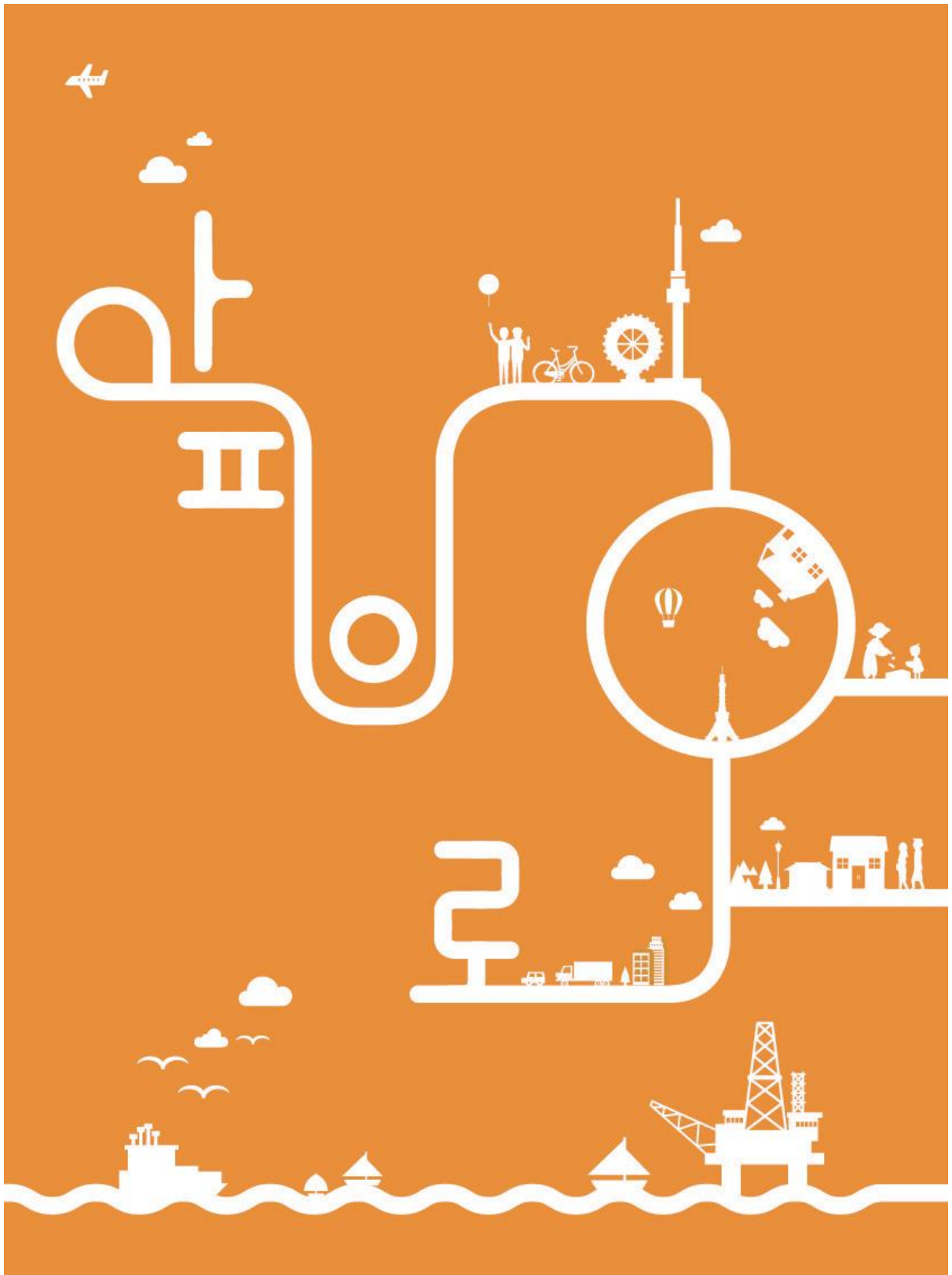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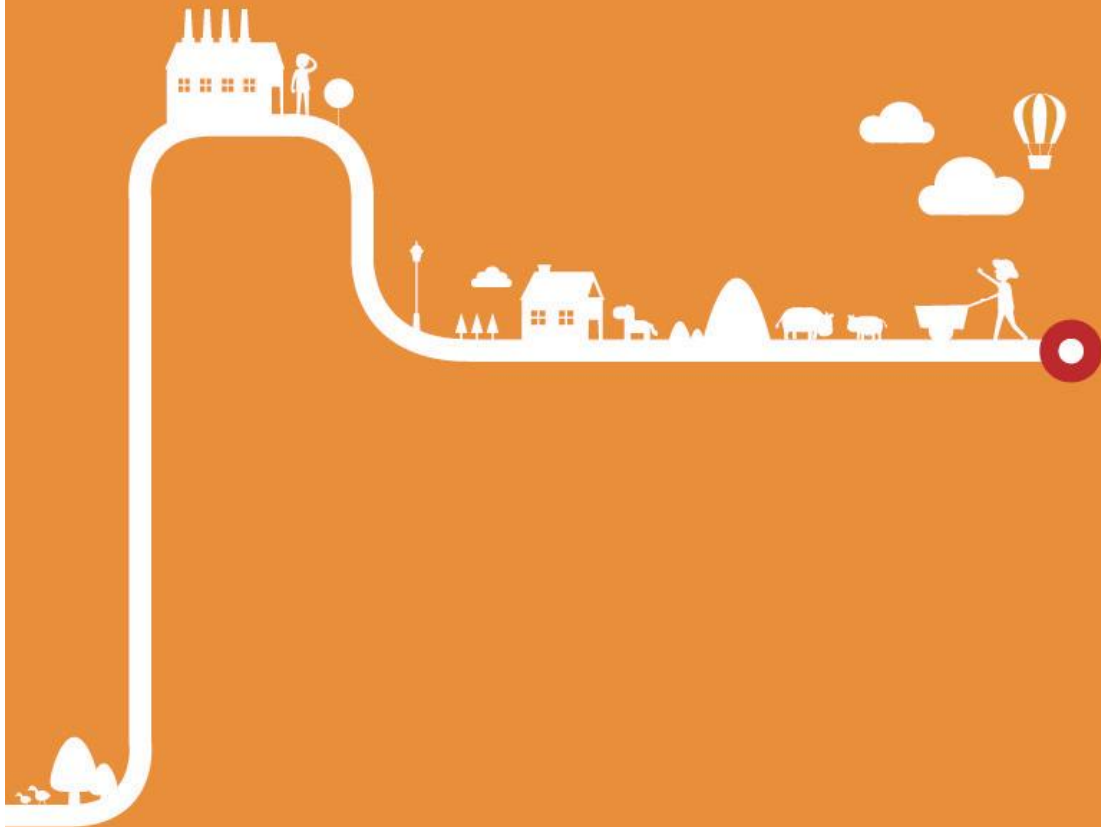
골고루 잘 사는 지역발전

지방자치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227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 부여	228
	중앙권한 및 사무의 적극적 지방이양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229
	지치경철제 도입으로 가정과 학교 등 생활 주변의 치안 강화.....	230
활기찬 농어촌 농어촌 경제활성화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재해 지원대책 마련	233
	농촌지역에 복지시설 제공으로 농촌 생활여건 개선	234
	풍수해 및 가뭄 대비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구축	235
	농업 생산과 가공·유통·관광·체험 등의 융복합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23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활용가능성 제고 및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237
	FTA 피해 최소화 및 피해농가 지원 확대	238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239
	발기반 정비 및 발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화·맞춤형 지원	240
	농촌지역 빈집을 체험·복지·생산 등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241
	수산물 원산지 표시·이력제 관리 강화 및 유통시설 현대화	242
	어촌·어항·수산시장 관광 명소화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243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추진.....	244
	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직불제 확대 등 소득 안전망 강화.....	245
	어업인 복지서비스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246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활기찬 농어촌 해양강국 건설	해운거래소 설립 및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247
	해양환경 개선 및 연안정비사업 지속 추진 248
	항만공간의 다기능 복합활용 지원 및 재정·민간투자 확대 249
	노후여객선 신규건조 지원 및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250
	e-Navigation 및 선박평형수 기술 개발 선도 251





내일을 살리는 **열정 앞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뜨거운 열정 하나로
내일을 향해 자신있게 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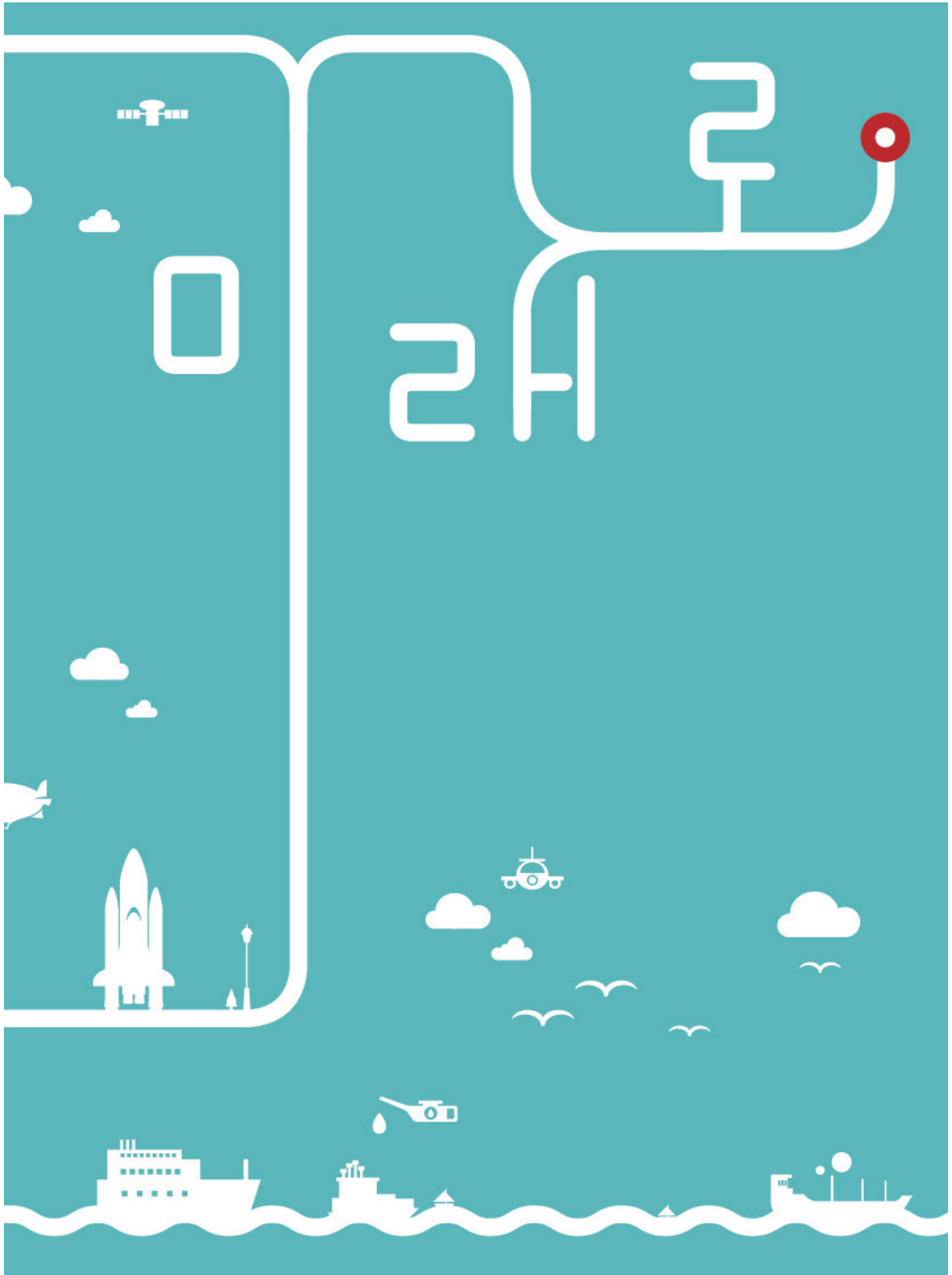


-새누리당 20대공약(국민안전/환경안전)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미래로!**

변화도 개혁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긍심과 긍지로 새롭게 도전해봅시다!





미래 변화의 중심

살기좋은 대한민국, 여성도 우리 아이도 모두 안전합니다

국민안전

-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 전국 18개 지역에 스마일센터 설치
- 순찰에 필요한 기초 경비 지원 확대 및 젊은층 참여 확대로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 우범자 소재 파악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근거 법제화
- 신고문화 활성화,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
- 정부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국민편의제고
- 뒷골목, 우범지역 등에 CCTV 확대 설치
- 시민의 수면권·평온권을 침해하는 야간집회 일정시간 제한 추진
- 주택가·상가 주변의 생활도로구역 지정, 횡단보도 설치 기준 완화
-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우려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 심리장애로 고통받는 소방관·경찰관의 심리치료센터 확충
- 자치단체가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안전도시 인증
- '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
- 육상·해상 특수구조대, 골든타임 내 구조가 가능하도록 헬기 등 장비 확충
- 하천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보호
-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공유분석센터 지원, 훈련장 구축 및 R&D 투자 확대
- 원자력 안전을 위한 환경구축, 방사능 재난 예방 및 모든 정보 원칙적 공개
- 모든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
- 유아·청소년 대상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확립

아동학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현재는 ...
- 아동학대 신고는 '12년 10,943건 → '13년 13,076건 → '14년 17,791건 → '15년 18,9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우리나라 1천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1.1명 수준으로 미국(9.1명), 호주(17.6명)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웃과 학교의 무관심, 병원·경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가 많아 종합대책 마련 시급

- 미래는 ...
-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 활동 및 관련 정책 수립
 - 출결석 상황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중심의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 아동 상담, 정신건강 및 학대트라우마 교육,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및 아동치료병원 지정·운영
 -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학대까지 전담하는 학대전담경찰관 설치 추진
 - 예비부부부터 출산, 학부모까지 단계별 학부모 교육 체계적인 지원
 - 아동학대 관련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 : 총예산 대비 0.0047% → 0.1% 수준
 -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여성·아동 대상 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여성·아동 대상 폭력이 지속됨에 따라, 폭력예방활동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

미래는 ...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확대
 -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지원시설 및 돌봄비용·간병비·의료비 등 지원 서비스 지속 확대
 -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자 교육
 - 가정폭력 피해아동 사이버상담실(반디톡톡) 1366 지역센터(17개소) 확대 운영
- 여성·아동 대상 폭력 예방체계 강화
 - 지역 내 여성폭력예방활동 거점센터 지정(신설) 및 통합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확대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성교육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농산어촌지역 및 취약지역 중심으로 신규 설치
 - 여성폭력예방교육강사 국가자격증화 등을 통해 여성·아동 폭력 예방 체계 강화 및 전문화 도모

치료받을 수 있는 스마일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현재는 ...

- 범죄피해자의 치료 및 자립을 지원하는 스마일센터가 전국 8개소 설치 운영 중, 강력사건 피해자 중 6%('14년 기준)에게만 시설이용이 제공되어 대다수 범죄 피해자들은 체계적인 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 범죄피해를 당하고 심할 경우 2차 피해(자살 등)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함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전문심리 치료기관으로서 스마일 센터 서비스 전국 확대가 필요

미래는 ...

전국 18개 지역에 스마일센터 설치

- 20대 국회의원 임기 내 지역별 인구수, 강력범죄발생률 등 심리치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8개 지역에 스마일센터를 확대 설치 ('16년~'19년, 총 10개소 추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시 스마일센터 신규 설치 예산을 우선 반영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높여 가겠습니다

현재는 ...

- 전국 읍·면·동별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원(105,726명, '16.1)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만으로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
 - 자원봉사 활동이긴 하지만 조직 성격상 일정한 근무(인당 2주 1회, 2.8시간 순찰)가 불가피함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 안전조끼, 후레쉬봉 등 안전장비 및 방한용품 지원: '16년 예산, 약 11억원
간담회비: 2천만원(지구대별 연간 5천원 수준)
- 참여 연령층도 대부분 40대, 50대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

미래는 ...

순찰에 필요한 기초 경비 지원 확대 및 젊은층 참여 확대로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 순찰활동에 필요한 기초 경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안전용품 및 방한용품 지원 확대, 간담회비 지원예산의 현실화
- 대학생 등 20대, 30대의 젊은층 참여를 확대하여 자율방범대의 역량 강화
 - 전국 100여개 경찰관련학과 설치 대학과 협력, 순찰 활동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하는 경·학 학점제 프로그램 확대(현재 20개 학교와 협력하여 진행 중임)
 - 대학생 등 젊은층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토록 적극 유도
-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대학생 등 젊은층의 참여 확대로 방범 활동의 역량 강화에 기여

재범 우려가 높은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현재 경찰의 우범자 관리는 직접적인 근거 법 조항 없이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규정과 우범자 관리 규칙(예규)을 근거로 운영
 - 대상 죄종 :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 조직폭력(8개 죄종)
- 법적근거 부족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우범자에 대한 내실있는 정보 수집이 어렵고, 소재불명의 우범자는 통신자료 확인 등 법원 영장 없이는 수사 불가능
 - ※ '15.12 기준 : 우범자 39,308명 중 소재 불명자 4,133명(10.5%)

미래는 ...

우범자 소재 파악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근거 법제화

-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경찰관의 질문 등에 대한 우범자의 협조 의무 및 경찰의 우범자 자료수집 권한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우범자 관리 기반 마련
 -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우범자의 소재발견과 실질적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 조사권한 확보
 - *우범자심사위원회(법조인, 시민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구성하여 조사권 남용 및 인권 침해 방지
- 경찰·검찰·보호관찰소·교정시설 등과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체제 구축
- 법 개정사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손쉬운 스마트폰 신고, 자원봉사로 인정하겠습니다

현재는 ...

- 아동학대, 기초질서 위반 등의 근절을 위해 신고가 필요하지만 번거로움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신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원봉사 참여율은 '13년에 비해 1.7%p 감소('15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미래는 ...

신고문화 활성화,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

-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봉사를 도입
 -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문턱을 낮춰 국민들의 관심 제고
- 자원봉사 인정 기준을 시간에서 횡수로 확대 개편(1365자원봉사포털)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국민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신고 등 '마이크로 자원봉사' 인정체계 마련
-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 간의 자원봉사 실적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
 - 공공기관(행자부 1365자원봉사포털, 복지부 VMS, 교육부 NEIS, 여가부 DOVOL)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수용하는 폭넓은 자원봉사 실적관리 네트워크 구축

국민불편, 110에서 응답하겠습니다

현재는 ...

- 부처별 콜센터 운영으로 국민들이 만원이 있을 때 많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기도 어렵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움
 - 인지도가 높은 112와 119의 경우 비긴급 민원전화가 많아 긴급전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 국민불편 해소 및 긴급 상황 우선대응 위한 정부 민원상담전화 일원화 추진 필요

미래는 ...

정부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일원화, 국민편의제고

- 정부 각 부처 콜센터 대표번호와 110번 연계 지속 확대 추진
- 비긴급 신고전화의 110 연계 추진
 - 국민안전 관련 20개 신고전화를 긴급콜(112·119)과 비긴급콜(110)로 이원화
 - '16년 7월부터 비긴급 신고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센터(상담원 125명) 신설·운영 개시
- '17년부터 110콜센터를 공휴일(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에도 운영
- 회선 증설 및 상담원 증원 등을 포함한 상담인프라 확충

우리 가족이 밤거리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전국적인 강력범죄 발생 증가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
 - 전체 범치는 감소('07년 1,836천건 → '14년 1,778천건, 3.27% 감소)한 반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크게 증가
 - * '07년 약 52만건 → '14년 약 58만건(11.5% 증가)

- 미래는 ...
- **뒷골목, 우범지역 등에 CCTV 확대 설치**
 - 뒷골목 등 우범지역, 여성안심구역(전국 435개소) 등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운영
 - * CCTV 설치 후 지역별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
 - CCTV 효과 분석 결과, 5대 강력범죄의 감소(26.6%)와 주민의 불안감 감소 효과 뚜렷



밤잠을 설치게 하는 심야시간 집회는 금지시키겠습니다

현재는 ...

- 종전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 '09.9 이후 현재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 지연으로 야간집회 전면 허용
- 도심 휴식공간인 공원이나 광장 등에 집회신고 후 노숙투쟁, 플래카드·천막 등의 장기간 설치로 시민불편 가중 및 도시미관 저해
- 타 법에서도 야간금지 규정이 있고 주요 선진국도 제한
※ 「공직선거법」 제102조(야간연설 등 제한), 「국민투표법」 제47조(야간연설금지) :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

미래는 ...

시민의 수면권·평온권을 침해하는 야간집회 일정시간 제한 추진

-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야간 집회시위 제한 자체가 위헌은 아니고, 집회 기본권과 국민 수면권 등을 비교하여 직장인·학생의 집회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야간집회를 일정부분 제한하라는 것임
-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금지
- 법 개정사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현재는 ...
- 우리나라의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4.1명으로 OECD 평균 1.1명에 비해 높아 교통안전 대책이 긴요
 - 특히, 주택가·상가 주변의 좁은 도로(폭 9m 미만)에서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14년 기준 53.5%) 발생으로 대책 시급
 - 또한 현행 횡단보도간 이격거리(200m) 규정으로 대도시에서는 무단횡단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미래는 ...
- 주택가·상가 주변의 생활도로구역 지정, 횡단보도 설치 기준 완화**
- 현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30km/h 제한을 주택가·상가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도 적용하는 생활도로구역 제도를 법제화 추진
 - ※ 현재 지침으로 생활도로구역을 운영('15년 기준 259개소) 중이나 인식 부족으로 실효성 미흡
 - 횡단보도 설치기준(이격거리)을 완화하여 도심부 이면도로 등 무단횡단이 잦거나 횡단수요가 많은 곳에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법 개정사항 : 「도로교통법」 개정(생활도로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횡단보도 설치기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허용하겠습니다

현재는 ...

-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14.1)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오류 등의 경우에 한해 정정만 가능함

※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이 번호변경을 규정하지 않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15.12.23)

미래는 ...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우려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 변경절차: 변경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
- 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가 인정되는 자
- 심의기구: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법 개정사항: 「주민등록법」 개정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신체적 위해 등 2차 피해 예방

심리장애로 고통받는 소방관·경찰관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소방관, 경찰관은 직무환경의 특성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장애로 고통받을 확률 높음
 - 소방관의 경우 연평균 7.8회 정도 극심한 외상사건에 노출되며 정신장애로 인한 자살자 급증, 전체 39% 수준은 PTSD·알코올장애·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
 - '13년 고용정보원의 직무스트레스 조사결과(직업 700개) 경찰관이 가장 높음
- 현재 트라우마센터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

미래는 ...

심리장애로 고통받는 소방관·경찰관의 심리치료센터 확충

- 심리장애를 사전예방에서 사후치료까지 전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 사전예방책으로 심신안정실,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기회 보장
 - 사후치료책으로 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지원 강화, 트라우마센터 확충
- 상담·치료를 희망하는 소방·경찰공무원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확충
 - 소방 : 심신안정실 '15년 131개소 → '20년까지 1,350개소
심리상담실 '15년 30개 소방서 → '20년까지 205개 소방서
 - 경찰공무원 : 트라우마센터 '15년 4개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 '20년까지 전국 18개소(서울·경기 각 2개소, 그 외 14개소)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국제안전도시를 인증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공동체와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 지역별로 안전 위해요소에 부합하는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주도의 안전 사회 추진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
 - '15년부터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각종 안전 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안전지수를 공표하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

- 미래는 ...
- 자치단체가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안전도시 인증**
- 자치단체 주도로 UNISDR(유엔재해경감전략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도록 정책패러다임 전환 추진
 - 도시의 재해위험 경감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및 시민의 인식 제고
 - 지자체별 자발적 재해예방활동 유도, 각종 도시개발 계획에 재해위험경감을 반영,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촉진
 -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원
 - 지자체가 10가지 핵심요소(10 Essentials) 이행 계획 제출 → UNISDR 심사를 거쳐 국제안전도시 인증
 - 전 세계 85개국 약 1,100개 도시 캠페인 참여('15.12 현재)
 -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행정 지원 및 인증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재난 발생시 모든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통신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현재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국가 전체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현장에서의 통합대응체계와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완료가 매우 중요

- 미래는 ...
- '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
- 군, 경찰, 소방, 지자체 등 재난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통신시스템의 안정성, 보안성 및 즉각 대응성 확보 추진
 - 재난발생 초기 신속한 협업과 일사불란한 현장지휘 기반 마련
 - 재난현장 영상 및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 구축
 - 현장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지원기능 강화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단계 :
 - '15년 : 강원도 3개 지역(평창, 강릉, 정선)
 - '16년 : 9개 시·도(충남, 전남, 경북 등)
 - '17년 : 서울·경기, 6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등)

육지와 바다,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하여 안전하게 구조하겠습니다

현재는 ...

-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수구조대를 설치·운영 중
 - 육상 : 4개 119특수구조대(경기 남양주, 대구, 전남 장성, 충북 충주)
 - 해상 : 3개 특수기동대(부산, 동해, 목포)
- '15년에 조직체계는 구축하였으나, 청사 등 시설과 헬기 등 출동장비, 구조 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는 여전히 부족하여 조속한 시설·장비의 보강 필요

미래는 ...

육상·해상 특수구조대, 골든타임 내 구조가 가능하도록 헬기 등 장비 확충

- 특수구조대를 중심으로 재난현장에서의 골든타임 내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 개선
 - 육상재난 : 119 특수구조대
 - * 임시 청사(광주, 천안)를 활용하고 있는 호남, 충청·강원특수구조대의 전용 청사 설치
 - * 현재 보유헬기 4대를 구조대별 최소 2대(총 8대 이상) 확충
 - * 출동차량, 구조장비, 개인장비 등 출동 필수장비 보강
 - 해상재난 : 특수기동구조대
 - * 출동 헬기(현재 1대 보유) 최소 2대 이상 확충
 - * 고속구조보트, 심해잠수장비 등 첨단장비 보강
-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특수첨단장비 등이 부족한 시·도 소방본부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

하청근로 위험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원청이 하청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작업에만 한정되어 질식 등 다른 위험작업에 대한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 산업재해를 유발
 - '15.1.12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질식사고로 3명 사망
 - '15.4.30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질식사고로 3명 사망
- 하청근로자 안전작업 관리 미흡
- 원·하청 사업주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을 협의·조정하는 제도가 있지만 작업 내용과 업체의 잦은 변경으로 현장에서는 미흡
 - 도급계약시 안전관리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노무비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어 하청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흡

미래는 ...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보호

- 도급사업에서 원청이 하청에게 제공하는 위험정보 제공범위를 질식사고 우려가 있는 도급사업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16년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국회제출 계획
- 하청근로자 안전작업 매뉴얼 및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 원·하청 간 위험작업 조정 등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을 개발·보급
 - 안전관리 비용이 반영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이버보안이 강화됩니다

- 현재는 ...
- ICT, 금융, 제조 등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해서는 사이버안전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 미래는 ...
-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공유분석센터 지원, 훈련장 구축 및 R&D 투자 확대**
- 영세,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취약점 점검 및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바우처 제도」 도입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 의료, 에너지 등 분야별 사이버위협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지원 강화
 -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침해사고 재구성 및 모의해킹 실험 등을 위해 실전형 사이버 보안 훈련장(Security-GYM) 구축 등 전문인력 양성
 - 산업 연계 보안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확대
 -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보안 기술개발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가·공공 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 안전 R&D 투자 확대
 - 국가·공공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및 유망 신기술과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융합·사회문제 해결 등 3대 R&D 확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최우선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는 ...

- 원전 인·허가 과정 등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 정보공개 등 안전관리 투명성 요구 지속 증가



미래는 ...

원자력 안전을 위한 환경구축, 방사능 재난 예방 및 모든 정보 원칙적 공개

- 방사능 재해로부터 신속히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 향후 원전 해체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체계 완비
-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새롭게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 원전 관리·운영체계의 근원적 개선 및 원전에 대한 안전 심·검사 강화를 통해 원자력 안전 최우선 환경 조성
-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 및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 원전 운영부터 해체까지 전주기적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 완비
- 원자력 안전관련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방식으로 전환 등 대내·외 소통 역량 강화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

- 최근 인터넷상의 대다수 불법·음란정보가 해외사업자(SNS, 텀블러, 구글 등)를 통해 급속 확산됨에 따라 국내 ISP 사업자가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차단에 한계
 - 최근 워터파크 몰카 및 소라넷 등의 개인 성행위 영상 등 권리침해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및 사후관리가 필요

미래는 ...

모든 청소년 휴대폰 가입자에게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차단수단 보급 의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휴대폰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유해정보 차단수단(예 : 네트워크 차단 등) 적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보급 확대방안을 추진
 - '15년 12월 말 현재 청소년 휴대폰가입자는 약 407만명으로, 이 중 차단수단 설치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15.4.16~) 이후 약 158만명임
- 인터넷방송, SNS 등 국내·외 주요 포털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활성화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인력 증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로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는 ...

-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사용 연령이 유아·초등학생까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악성댓글, 유언비어 등 사이버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



미래는 ...

유아·청소년 대상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확립

- 부모와 함께하는 윤리교육(가칭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개발·운영하여 자녀에 대한 인터넷 역기능 피해예방 교육 및 이용습관 지도 강화
- 유아·어린이 및 학부모·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바른 인터넷 창작 동요제' 개최
- 인터넷윤리 체험관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을 활용한 유아·초등학생 대상 학교 밖 체험활동 확대
 - 선플달기, UCC제작, 게임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확충
- 지속가능한 인터넷역기능 해소를 위한 공동 구심체 필요에 따라 민간 중심의 공익법인 설립 추진
 - 인터넷문화 학술 연구, 인터넷문화 아카데미 운영, 인터넷 문화운동 및 홍보, 공익활동 및 피해자 구제활동 지원 등

미래 변화의 중심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환경안전

- 어린이·어르신 활동 공간 환경 개선 및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 환경책임보험 구제급여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취수원 다변화, 물절약 체계 구축
 -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및 정비 추진
 - 도심 속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바이오툼 조성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3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한중 협력강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실현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

어린이·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한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는 ...

- 성인에 비해 빠른 신진대사와 신체적 미성숙으로 환경오염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 특히, 국내 어린이의 경우 혈중 중금속 농도가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
 - ※ 6세~11세 어린이 혈액 내 납 농도($\mu\text{g}/\text{dl}$) : 한국 1.26, 미국 0.84, 캐나다 0.79 (어린이·청소년 환경노출과 건강실태 조사사업(12년~13년), 국립환경과학원)
- 기후변화에 따른 노령인구 건강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삶 확보를 위한 배려 필요

미래는 ...

어린이·어르신 활동 공간 환경 개선 및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 어린이 대책 :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 안전관리 강화
 - 활동공간 :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우수시설 환경안심인증
 - 용품 : 유해물질 실태조사, 기준초과 용품 판매차단 및 수거 조치, 제조업체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지원 및 저감 컨설팅(90개소/년) 추진
- 환경성 질환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및 부모 대상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 어르신 대책 : 어르신 활동공간 생활환경 진단, 개선, 환경유해물질 노출과 노인 질환간의 인과관계 조사·연구를 위해 노인질환 분야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운영(17년)

환경오염피해를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16.1)으로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법적기반 마련 완료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시행 필요

- 미래는 ...
- 환경책임보험 구제급여로 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 '16년 7월부터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받고, 원인미상 등인 경우 국가가 배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환경오염피해 유발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부과
 - 원인불명, 무자격 등의 사유로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직접구제(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 환경책임보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가입대상 목적물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안전관리 능력 제고 유인
 - 환경오염피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환경오염피해자에게 환경오염피해의 유형,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구제급여 관련 조사·연구 활성화
 - 원인자 미상, 부존재 등으로 환경오염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노후상수도를 개량하여 안전한 물공급과 가뭄을 극복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전국 지방상수도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상수관로 30.6%(55,312km), 정수장 58.8%(286개소)로 조사
 - 郡지역 누수율은 27%로 대도시(5.1%) 비교 5배 이상, 전국 누수량(6.6억㎡, 손실액 5,500억원)은 팔당호 저수량의 2.6배에 달함
 - 이상가뭄 현상의 빈번한 발생 및 장기화로 물 부족 문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미래는 ...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취수원 다변화, 물절약 체계 구축**

-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상수관로, 정수장) 개량사업 추진
 - '16년 시범사업(2개소 40억원) 후, '17년부터 단계적 사업 추진
 - 누수저감으로 유수율 80% 이상 달성시, 수자원 3.5억㎡/년(팔당호 저수량 1.4배에 해당) 절약 가능
- 가뭄대비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시스템 구축 등 취수원 다변화 추진
 - 식수전용저수지, 하천복류수댐, 관로비상연계·복선화 등 가뭄 취약지역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
- 물 수요관리 목표제 강화 및 절수형 제품의 설치 의무대상 확대로 물 절약 체계 구축

싱크홀 방지를 위한 하수관 정비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는 ...

- 도심지역 지반침하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 등 정비 필요
 -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해 최근 4년간('12~'15.7) 총 167건의 지반침하 발생

미래는 ...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및 정비 추진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 대형 공사장 인접 등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 ('15년) 90개 지자체 대상 약 9,582km 노후관로 조사 실시
 - ※ ('16년) 49개 지자체 대상 약 7,000km 노후관로 조사 실시
- 하수관로 측정·진단기술 개발 및 활용
 - CCTV 조사결과와 연계, 하수관로에 최적화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조사 및 진단 기술 개발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 하수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파손, 누수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하수관로 교체·개보수 추진

도심 속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는 ...

-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나, 콘크리트화, 녹지공간 감소 등에 따라 건강한 생태휴식공간의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가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욕구, 쾌적한 도시환경, 생태학습·체험 등 자연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미래는 ...

도심 속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비오톱 조성

-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거나 방치·유 휴된 공간을 생태공간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 도시의 생태거점 및 휴식공간인 자연마당, 도시 어린이의 자연놀이공간인 생태놀이터, 공공시설 옥상을 활용한 비오톱 조성 등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현재는 ...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국민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대책 추진 필요

- 미래는 ...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3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한중 협력강화**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내 대기질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추진(~'20년)
 - 오염의 50%~70%를 차지하는 3대 국내 배출원(자동차, 사업장, 생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축 정책 추진
 -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24년, 200만대) 확대
 -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72개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량 감축(~'17년)
 -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300㎡이상)의 미세먼지 관리규정(안) 마련 등 생활오염원 관리
 - 중국 등 국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중국 내 제철소에 저감시설 설치, 공동 연구 등 협력 강화

환경과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는 ...

-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7%▽) 달성을 위해 교통, 생활환경 분야의 감축노력 극대화 필요
- 천연자원은 부족하고 좁은 국토에 매립장 확보는 어려워 더 늦기 전에 매립 제로화·재활용 극대화로 자원전쟁시대 대비 필요

미래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실현

- 온실가스 감축: 비산업부문 사업장(가정·상가·학교 등)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및 노후 시설 교체 유도
- 친환경차 보급: 친환경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급, 구입단계 세금감경
- 매립 제로화·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환경성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
 -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며 재활용 촉진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는 ...
- 현재 근로자 안전관리 및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는 구축되어 있지만, 건설현장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는 미흡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재
 - 국내 연평균 발생하는 재해 손실액은 약 6조원, 건설공사 목적물 피해금액은 약 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6.6조원 중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재해 손실 비용은 약 90%에 달하는 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 감리 비대상인 200억원 미만 공사 대부분이 지자체 발주 공사
 - 설계단계 안전성 검토 실시되지 않고 있음

- 미래는 ...
-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 건설현장에서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 방안 마련
 - 건설 안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지자체 지원 강화



